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현황과 과제

Univ. of Sussex, SPRU 방문연구원
(전 한국과학문화재단 사이언스코리아팀장)
신이섭(leesup@ksf.or.kr)

1. 서론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2004년 4월 과학의 달에 추진이 선포되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황과 과제를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추진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명칭이나 개념, 성격 등에 있어 다소간의 혼란이 있지만 이는 과학문화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연과 내용의 광범위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핵심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그 핵심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있는 논의 및 추진을 위한 현황 제시 및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과학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사업계획(프로젝트 또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보다 더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한 묶음의 특별한 과학문화사업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이 사업이 특정한 배경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목표는 사회적, 시대적 필요 및 추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과학문화사업에 대한 시대적 필요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과학문화사업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학문화사업이라는 큰 의미 있는 범주가 있고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그 과학문화사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사업계획 초기에 그리고 진행 중에도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문화 사업을 넘어 국민적 정신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문화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1960년대 후반 계몽적 성격의 과학문화사업이 출발할 때도 그러하였고, 1973년도에 선포된 ‘전국민 과학화운동’도 같은 맥락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30년대 일제시대 때 선포된 ‘과학데이’ 행사도 같은 맥락이 강하였다. 현재도 과학문화사업의 목적 중에 ‘합리, 효율, 창의’가 넘치는 사회 조성이 여전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을 우리 사회의 정신적 토대의 중요한 일부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를 보강하여 좀 더 학술적 논의를 거쳐 세련된 형태로 다듬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이러한 정신운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것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목적 또는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인 정신운동으로 정의하게 되면 추진 형태나 조직, 추진 방식 등 많은 부분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추진 기간의 문제이다. 현재 추진기간이 명확치 않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사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 방향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이상 기간을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추진 배경

왜 2004년도에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일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정부가 제시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과제와 관련된다.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과학기술계 내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과학문화사업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의 하나로 자리잡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기술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문화사업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해 가시화된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야 말로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일 것이다.

둘째로는 과학문화사업의 추진 단계상 일정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도부터 과학문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때 근 10년 이상 사업이 전개되었다.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한계가 더 많이 노정되었다고 본다. 많은 부분 구조적인 한계들이다. 즉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과학문화사업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계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국가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과학문화사업의 추진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가 자연스럽게 과학문화사업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과 일반 국민 사이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요구이다. 그 동안에는 이러한 정보의 흐름 없이도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계와 사회문화 사이의 정보 흐름의 정체로 인한 발전의 지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해와 합의,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성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선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발전을 지체시키고 저해한다는 개발시대의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오히려 이해와 합의하에 추진될 때 비용도 줄이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문화사업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다.

4. 어떤 사업을 하는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과학문화창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과학문화확산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과학문화창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추진 사업의 설정은 그 동안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한 한계로 나타난 것들을 토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것을 활용한다거나 개선하는 등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과학문화사업을 전개하면서 드러난 한계를 요약한다면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시스템의 구축 없이는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다양한 과학교사단체, NGO,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과학문화사업의 종류와 면면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정한 역할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한다고 해서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낙관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다 쉽게 적은 예산으로, 보다 성과있게, 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12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그 핵심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다.

5. 12대 사업의 내용

12대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추진방식 등에 의거 3대 중점사업, 6대 주요사업, 3대 기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대 중점사업과 3대 기획사업은 과학문화가 창달되고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3대 중점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며, 3대 기획사업은 많은 예산 등이 소요되어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6대 주요사업은 청소년부터 대학생, 사회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대상별로 특화된 찾아가는 과학문화 사업이다.

3대 중점사업은 '전국 3,500여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전국 1만 학교에 청소년과학탐구반 구성' '1천만 과학사랑 커뮤니티의 구축'이다.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전국 읍면동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과학교실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과학기술계(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가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채널로서 과학기술이 지역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상호 대화하며 이해를 넓히는 상설적인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과학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의 이름만 있던 과학반을 탐구하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과학반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과학영재사업과는 차별되게 과학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1천만과학사랑커뮤니티’는 우수하고 다양한 과학컨텐츠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 흥미, 지역 등 다양한 연관에 의거 유익한 과학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3가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커다란 비용의 투입없이 쉽게 모든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과학교실의 운영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내용과 형식, 대상을 특화시켜 나간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각 지자체마다 과학문화회관이나 과학관, 과학센터 같은 시설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문화시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학교의 과학반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1천만 과학사랑 커뮤니티는 우리의 발달된 인터넷 환경을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우수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면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가장 성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대 중점사업은 특정한 계층에 집중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문화확산사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사업’, ‘재미있고 유익한 대중과학이벤트의 확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과 사회 프로그램 운영’,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언스 포 리더스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과 국회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사업이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사업이라고 할 때 여성, 특히 주부를 위한 사업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부를 위한 사업은 생활과학교실에서 수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사회’(STS) 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문화확산사업’과 ‘재미있고 유익한 대중과학이벤트의 확산’ 사업은 과학문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업 분야이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인기있고 성과와 파급력이 가장 큰 사업이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 동안 다양한 과학축전 등을 가장 먼저 추진하여 왔고 거의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문화사업도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에서 굳이 이 사업을 12대 사업 중의 하나로 잡는 것은 ‘특별한’ 이라는 수식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이 두 가지 사업 분야에서도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내용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기술 전용채널의 설립’이나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설립 등으로, 그리고 ‘대중이벤트의 확산’도 보다 구체적으로 ‘1 광역시 1 과학축전’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3대 기획사업은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전국 20만 어린이놀이터를 과학문화놀이터로 바꾸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키트의 개발 보급’ ‘대전 EXPO과학공원 활성화와 과학센터의 전국적 건립 및 네트워크화’ 등이다. 3대 기획사업이야말로 우리의 과학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과학문화사업을 언급할 때마다 자주 선진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다. 요지는 선진국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잘 되고 있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시설이다. 각 도시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과학관, 박물관, 과학센터 등이 그 지역의 과학문화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큰 돈 들이지 않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문화사업의 결정적인 한계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면 된다. 그러면 큰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보다 큰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대 기획사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에 20만 여개가 된다는 놀이터에 과학적 개념이 적용된 놀이시설들을 갖추는 것은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다. 어찌보면 약간은 형식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약간은 방치된 공간에 의미와 개념을 부여하여 활성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과학 키트의 개발 보급은 중요하다. 다양한 키트를 통해 직접 만들어보는 것, 작지만 이러한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업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모델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확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관, 과학센터의 확대는 과학문화확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시 격에 많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이 사업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 즉, 국민적인 과학공원으로서의 기능 회복 정도로 사업내용과 목표를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과학문화도시' 선정 육성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확산 전략이다. '과학문화도시'는 사이언스 코리아의 다양한 사업을 도시 단위로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10월 15일에 신문 공고를 통해 사업취지를 알리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0개 도시에서 신청하였다. 신청은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책임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 3개 기관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과학문화도시의 의미는 한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과학문화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책임운영기관이다. 지역책임운영기관은 과학문화사업을 전개할 인적, 물적자원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지자체가 별도로 구성한 전담조직이 담당하며 도시 내의 주요한 과학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활과학교실의 실질적 운영, 청소년 과학탐구반에 대한 멘터링, 지역과학문화행사의 기획, 추진 등도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책임운영기관을 지자체, 지역교육청,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문화창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문화도시'사업은 1차로 전국 10대 권역별로 3개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각 도시별로 지역 여건이나 비전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지자체가 과학문화사업을 자신들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였다는 데 있다. 지자체가 과학문화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

역의 다양한 과학문화 주체들을 지원, 육성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문화사업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전기이다.

7.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의견

1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리고 발전의 과정에 있으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이므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끝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 지 더 분명해진다.

첫째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달성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한 수준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과학문화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회적 수요를 깊이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과학문화사업이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첫째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의 추진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을 정해야 그에 따른 목표와 재원 등의 조정 및 추정이 가능하다. 단계별 목표와 전략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추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12대 사업과 '과학문화도시' 등 세부 사업들의 목표를 추진 기간에 맞추어 보다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문화확산'과 같은 사업의 경우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정할 경우 목표를 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목표가 없을 경우 노력을 집중할 수가 없고 성과도 측정하기 어렵다. 이 사업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문화사업 활성화 및 향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다는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이벤트의 확산,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각에서 목표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결어 :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의 의의와 전망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설립(1967년)과 맞추어 '국민계몽사업'의 성격으로 출발하여 1973년 '전국민 과학화' 사업으로 전개되었고, 1980년대는 청소년과학사업 위주로 전개되다가, 1990년대에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특별법」에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이 정부가 수립,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0대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2004년도에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은 이러한 과학문화창달사업의 역사와 맥락이 닿아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창달사업은 국가적 비전의 성취를 위한 지적, 사회문화적, 국민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원대한 목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과학문화창달 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빈약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과학문화창달 사업이 국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일정한 도약이 없이는 국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기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문화사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과학문화사업이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자리잡는 것이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추진주체가 분명하고 확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에 “민간주도, 정부후원”의 기본 프레임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격 등을 볼 때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 하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12대 사업을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성격의 사업도 있다.

우리의 민간 부문의 역량이 과거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놀랄만한 의지와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여전히 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후의 운영 및 확산은 민간 및 지자체에 이관하는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일 때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프로젝트의 성공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